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(안) 주요 내용

1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□ (추진배경) 농업 분야 고령화는 지속되고 후계인력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, 장기적으로 **농업 인력구조 불균형**은 더욱 심화될 전망
 - '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12.4천가구(1.2%)로 지속 감소 중인 반면,
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'90년 18% 수준에서 '20년 56%까지 증가
 - *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(비중) : ('90) 323천호(18.2%) → ('10) 546(46.4) → ('20) 579(56.0)
 - *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(비중) : ('90) 258(14.6%) → ('10) 33(2.8) → ('20) 12(1.2)
 - 현 유입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, '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(65세 이상)은 76.1%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.2% 수준에서 정체 전망(KREI)
 - o 청년의 농업 진입 과정에서는 초기투자 부담*, 취약한 농촌 인프라 등 장애요인과 스마트농업 확산, 온라인 유통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상존
 - * 농지 실거래가격 : ('15) 52,979원/m² → ('21) 84,136
 - 그 간의 정책적 지원으로 청년농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,
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농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요구 지속
 - * 청년농 감소율 : ('05~'10)△21.8% → ('10~'15)△56.6% → ('15~'20)△13.5%
 - '영농정착지원사업' 도입('18) 등 창업 지원 강화로 신규 농업인력을 유입*하고, 농업계학교 등을 활용한 전문인력 지속 양성
 - *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중 신규창업자(비중) : ('18)680명(42.5%) \rightarrow ('20) 1,051(65.6) \rightarrow ('22) 1,409(70.5)
- □ (추진경과)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후계농실태조사, 연구용역 및 현장·전문가 의견수렴을 순차적으로 추진
 - * 농식품부 장관 현장 간담회 3회, 권역별 청년농 간담회 4회, 전문가·단체 협의 5회 등 현장 의견 수렴, 후계농업인 실태조사('22.3~5)를 통해 영농 활동 과정에서의 분야별 애로사항 조사 등
 - o 현장에서는 **초기 생활비 부담** 완화, **농지·자금** 등 투자 여건 개선, **현장** 중심의 맞춤형 교육 제공, 적정 수준의 주거·보육 서비스 제공 등 요구 지속

2. 목표 및 추진 전략

목표 :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농 3만명 육성

전략 🗓

"더 많은" 후계·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·개편
-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
-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

전략 [2]

보다 "쉽게" 농지·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.

- **농지은행 매매·임대 지원 강화** 청년농 대상 농지공급물량 대폭 확대,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, 선임대 후매도 도입
- **융자조건**(상환기간, 금리) **개선 정부**(금융공공기관) **직접투자 펀드 조성**

전략 ③

"전문<mark>농업인"</mark>으로의 "성장"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성장 단계별 맞춤형·현장형 교육 제공
-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
- R&D(기술, 판로,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) 연계 지원

전략 4

"쾌적하고 매력적인" 농촌으로,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.

- **임대주택 확대,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** 청년농촌보금자리,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- 농촌공간 정비,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







추진체계

- 정부-지자체-유관기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
- 농업 창업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
- ♦ 청년농 3만명+α 육성(~'27),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
- ⇒ 장기적인 유입 추세(5년 평균 26천명) 유지로 고령화율 완화, 청년농 비율 증가
 - ① 고령화율('40p) : (계획 이전) 76.1% → (계획 이후) 62.9 (13.2%p ↓)
 - ② 청년농 비율('40p): (계획 이전) 1.2% → (계획 이후) 10.0 (8.8%p ↑)

3. 성장단계별 지원체계

□ 예비 창업자 : 사전 보육 + 창업 준비 여건 제공

(1) 농업계 학생

- 농고 농대 연계교육
- **영농창업특성화**과정(농대)
- **한농대** 창업교육

준

비

진

입

정

착

(2) 비농업계 청년

- 창업 보육 프로그램
- * (시·도) 청년 ŒO 과정
- * (시군) 청년농업인 대학
- 스마트팜 보육센터

(3) 예비 귀농인

- 농촌에서 **살아보기**
- 청년귀농 장기교육

-

창업 준비 여건 제공

- **생활안정** : 장기보육과정 이수자에게 '정착지원금' 지원
- **승계지원** :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(20억원→ 30), 농지 증여세 면제
- **창업정보 플랫폼** : 농지·자금·주거 등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 통합 제공



② 신규 농업 창업자 : 창업 기반 + 진입·정착 여건 제공

(1) 후계농업경영인

(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이하)

■ **후계농자금** :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.5%

(2) 청년농 영농정착지원

(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)

- **정착지원금**:월 최대 110만원, 최장 3년
- 농지: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

농업스타트업단지, 선임대 후매도

(3) 50세 미만 신규 농업인 중 (1), (2) 外

■ **자금 :** 귀농자금 등

기타 융자

■ 지원금: 지자체별

보조사업

■ **농지**: 맞춤형 농지지원

(농지은행)

+

교육·컨설팅 확대,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 진입·정착 여건 제공

- 교육 : 선도 청년농 활용 교육 제공, 현장실습 교육 확대
- <mark>컨설팅</mark> : 창업형태(승계, 귀농 등)별, 창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<mark>정주여건</mark> : 주거여건 개선 보육서비스 확충, 농촌공간 정비,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



③ 전문농업인 : 후속 투자 + 전문 교육 + 융복합화 + R&D 지원

성 장

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술·경영 고도화 지원

- **후속투자** : 우수후계농자금, 청년전용펀드 등 추가 투자 자금 지원 확대
- **전문교육** : 첨단기술 기반의 품목별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
- **융복합화** : 융복합커뮤니티 지원, 예비인증제 등을 통한 소득 다각화 지원
- R&D : 현장실증, 실용화,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 등을 위한 R&D 지원 강화

4. 주요 추진 과제

① (유입) '더 많은' 후계·청년농에게 농업 분야 진입 기회 제공

< 주요 창업 지원사업 규모 변화 ('22 → '23) >

'23 4,000명 5,000명 500명

구분	′22	
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	2,000명	
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	3,000명	
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	300명	

- (영농정착지원)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, 지급단가 인상 및 지원요건·의무사항 완화 등 진입 유인 마련
 -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*하고,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**농지·자금·교육** 등 집중 지원
 - * 영농정착지원금 : ('22) 월 최대 100만원 → ('23) 110
 - 소득기준 등 진입요건을 완화*하고, **농외근로**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농외소득 확대 기회 여건 조성
 - * (현행) <u>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</u>의 건강보험 산정액(중위소득 120%) 미만 (개선) <u>본인 세대</u>의 건강보험 산정액(중위소득 120%) 미만
- (후계농 육성)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*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**
 하고, 승계농의 영농상속 공제 시 공제가액 상향(20억원 → 30, '23~)
 - * 후계농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종사 중인 사람 중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추가 융자 지원
 - ** 후계농/우수후계농 : ('22) 3,000/300명 → ('23) 5,000/500

2 (창업기반) 투자 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·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

- (농지) 청년농 수요에 맞는 농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,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적극 지원
 -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*하고, 매입 단가 인상('22: 388백만원/ha → '23: 408)
 - * ①간척지, ②비농업인 소유 '96년 이전 취득농지(844천ha), ③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(124천ha) 등

- 청년농이 선호하는 **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**할 수 있도록 ¹⁾**농업스타트업단지**, ²⁾선임대-후매도 등 신규 도입
 - 1) 유휴농지 매입 후 생산기반을 정비*하여, 임대형 스마트팜, 청년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한 **농업스타트업단지**** 조성('23: 6ha)
 - * ①단지 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최장 30년간 임대하거나, ②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매도
 - 2)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할 수 있도록 先임대-後매도 방식 도입('23: 20ha)
 - * 최초 계약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농지 대금 조기 납부 시 농지 취득 가능
-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구매 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단가* 및 규모 확대**
 - * 청년농·생애첫농지취득 지원단가 : ('22) 154백만원/ha → ('23) 254(65%↑)
- ** 청년농·생애첫농지취득 지원규모 : ('22) 100ha → ('23) 140
- 실거래가, 임차료 등 **농지거래정보**와 청년농이 사용할 수 있는 **유휴농지** 등에 관한 정보를 **농지은행 포털**을 통해 제공
- (자금) 청년농 대상 **융자 조건을 개선**하고 **과감한 펀딩** 제공
 - 후계농자금,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등 주요 융자자금의 **상환** 기간 확대(15년→25년), 금리 인하* 및 한도 상향** 추진
 - * 후계농자금 금리 인하 : 2% → 1.5 ** 후계농자금 한도 상향 : 3억원 → 5
 - < 후계농 자금 금리 인하, 상환기간 확대에 따른 1인당 연 평균 상환 부담액 >
 - 상환기간 확대, 금리 인하로 1인당 **연 평균 상환액 45.4% 감소**(3억원 대출 가정)

구분	상환기간	금리	연 평균 상환액(월 평균)
현행	5년 거치 10년 상환	2%	3,330만원(월 평균 277.5만원)
개선	5년 거치 20년 상환	1.5%	1,815만원(월 평균 151.3만원)

- 담보력이 미약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시 자부담분 및 장기 임대농지(15년 이상)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**농신보 보증** 제공
- **영파머스펀드** 조성 규모를 확대('21~'22 : 105억원 → '23~'27 : 1,000)하여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청년농까지 지원하고, **정부의 직접투자** 도입^{*}
 - *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보완('22.8월), '27년까지 150억원 이상 조성

③ (성장) 기술·경영 고도화를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 뒷받침

- (맞춤형 교육) 농업계 학교 창업률 제고, 예비농업인 실습 교육 강화
 - 농업계 창업 특화 교육인 '영농창업특성화대학(현재 5개교)' 규모를 확대하고, 농업계 학교 간 창업 연계 교육 강화
 -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대상으로 '선도농가 실습교육'을 도입하고, 9개 마이스터대학을 활용한 '청년농업 CEO 양성과정' 신설('23 :200명)
 -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,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'청년 실습전문교수'를 양성하여 신규 청년농 대상 강의 제공
- (융복합화) 지역 기반의 융복합 창업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유망 경영체를 인증하여 컨설팅·판로·홍보 등 맞춤형 지원
- (R&D) 청년농의 현장 실증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농업기술 실용화·특허출원 지원과 R&D 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

④ (정주여건) 청년이 살고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

- (주거·보육) '청년농촌보금자리*' 조성 규모를 확대**하고,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국공립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
 - * 농촌지역 청년층을 타겟으로 보육·문화·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 단지(개소당 30호 규모) 조성
 - **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규모(누적) : ('22) 5개소 → ('23) 9
- (공간정비)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·위생 등 생활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지원 확대
 - * 공간정비사업 운영 규모(누적) : ('22) 45개소 → ('23) 85
- (네트워크)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선·후배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구성·활동을 지원하고, 청년을 농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주체로 육성*
 - * 농촌서비스 공동체 운영 규모 : ('22) 22개소 → ('23) 30

참고1 농지 공급 확대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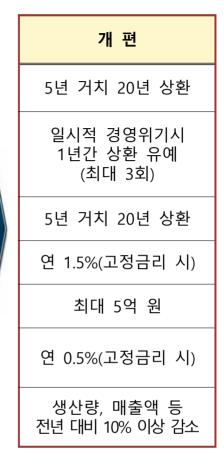
청년농 농지 공	급 확대		현행		개선
맞춤형농지 공급					
	농지은행		상속농지		'98년 이전 취득농지, 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 추가
	매입범위		간척지 매입 제한	상속농지	기 매입 비축농지 인접 간척지 매입 허용
· 비축농지 임대	매입단가		′22: 388백만원/ha		'23: 408백만원/ha
	매입규모		'22: 1,800ha		′23: 1,875ha
	임대기간		농업용 시설물 설치시 10년		농업용 시설물 설치시 25년(농신보 보증시)
· 청년농 농지 매입	지원단가		'22: 154백만원/ha (잔액은 자부담)		'23: 254백만원/ha (잔액은 농신보 보증 가능)
	지원규모		′22: 100ha		'23: 140ha
	진입단계		2ha		3ha
• 공통사항(지원한도)	E) 성장단계 (비축농지)	'	4ha		6ha
	사업규모				′23: 6ha
• 스타트업단지 조성 <mark>(신규)</mark>	지원방식				❷ 스마트팜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
・비축농지 비닐온실	사업규모				'23: 6ha
설치 임대 <mark>(신규)</mark>	지원방식				10년 임차 (평가를 거쳐 10년 재임차)
	사업규모				′23: 20ha
• 先임대-後매도 <mark>(신규)</mark>	지원방식				10~30년 장기임차 및 농지대금 완납 후 농지소유권 취득
임대수탁농지 공급					
• 임대수탁농지 임대	대상자		임대인 선택 우대		청년농 우선 지원
	지원한도		-		최대 4ha

참고2 후계·청년농 대상 금융지원 개선 방안 주요 내용

① 후계·청년농 대상 융자지원 주요 개선 내용

구 분		
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	상환기간	
	상환유예	
후계농 자금	상환기간	
	금리	
	지원한도	
우수후계농 자금	금리	
경영회생 자금	지원요건	

현 행
5년 거치 10년 상환
-
5년 거치 10년 상환
연 2%(고정금리 시)
최대 3억 원
연 1%(고정금리 시)
생산량, 매출액 등 전년 대비 15% 이상 감소



② 청년농 관련 농식품 펀드 주요 개편 내용

구	분
영파머스 펀드	투자대상
	조성규모
직접 투자	투자대상
	조성규모
정보 제공	플랫폼
	시업설명회

현 행
1차 생산 한정
누적 205억 원 조성
-
기관별 투자 정보 산재
연 2회 개최

